

# 노동자 3명 또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 이윤경 기자(부산본부) | ⓒ 승인 2020.12.21 13:50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올해 부산에서만 5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아래 부산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녹색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남영란 부산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매일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질식, 감전,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루 7명”이라며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의 아버지 이용관님의 단식이 11일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이 이들의 단식을 끝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남영란 부산노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이태환 부산노동본부 공동 대표(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직무대행)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태환 부산노동본부 공동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약을 통과시킨 다음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어제 평택 물류창고 5층 천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태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에 발린 소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가 하루 7명씩 죽어서는 안 된다”라며 “쓰러진 노동자들의 목숨과 살아남은 분노는 결국 민주당을 향한 비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4년 유예하자고 했다.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우려스럽다”라며 “민주당은 우선 법을 제정한 후에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갈 안전 문화 조성에 대해 고민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는 “기업의 이윤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행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4년 유예하자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라며 “현실을 바꾸겠다고 집권한 민주당은 바뀌어야 할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이 먼저 외치기 전 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누더기법 말고 제대로 된 법을 즉각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사람이 먼저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해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집권한 정부가 노동법 개약에 앞장섰다. 180석을 켜지만 사람 살리는 법 하나 만들지 않고 있는 사이 1년에 2,400명이 죽어 나간다”라며 “전 정권과 현 정권은 당명, 색깔만 다를 뿐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 통속이다. 법 제정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를 비롯해 부산 지역의 3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노동본부는 “기업 눈치 보며 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를 외면하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규탄하며 1인 시위와 동조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경 기자(부산본부) ziyo16@daum.net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